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다시 격돌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보수 2야 “경제지표 참혹”
여 “양극화 극복해야 포용국가”
노인 빈곤 해소위한 추경 제안



이낙연 총리(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비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2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경제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야당이 흑세 무만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민생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그야말로 ‘경포대 시즌 2’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시즌 1보다 더 불복버스더급이다. 경제 망치기, 최악의 경제성장률 기네스북에 등재해도 될 것”이라고 열을 올렸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닌 한국형 이념정책이다.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소득절망성장’이라며 질투하고 있다.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참혹한 정도로 비참하다”며 “기업 투자 의욕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데 그 요인으로는 과격한 노조 문제가 있다”며 “정권을 잡게 해준 민주노총이 정구한 정구서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관계가 설정됐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10대는 꿈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내가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 이후는 낙이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

실태를 비판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정부 경제정책의 전반적 기초가 옳은 방향이라고 옹호했다. 다만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책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액은 190조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절반에 불과하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회안전망은 더 강화해야 한다”며 “그런데 제1야당이 말끝마다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흑세 무민을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제발 공부 좀 하라”고 비방했다. 이어 “기초생활을 넘어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득 격차와 양극화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최고세율 70% 인상, 상위 1% 보유 자산에 대한 부유세 도입,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제안했다.

경제전문가인 같은 당 최윤열 의원은 “모든 국민이 성장 과실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자제로 유연성을 발휘해달라. 최저임금은 지역·업종 차등화로 보완하고 탄력근로제

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경제 현실이 과거 정부 탓만도 아니고 현 정부 정책의 실수만도 아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겸허한 마음으로 경제 현실을 인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경제 활력을 위해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바닥은 여전히 차가워 보인다. 일자리 만들기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노동 유연성과 함께 노동 안정성, 사회적 안전망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세 몰린 한국당

민주 “포항 지진 보수정권 무능이 부른 참사” 전방위 조사 예고
KT 화재사고 청문회 무산 시도 비난... 정경유착 의혹 도마위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포항지진 참사 원인과 KT 아현동 화재사고 청문회 무산을 놓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맹폭을 가했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재작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과거 보수정권의 무능이 부른 참사로 규정, 철저한 진상조사를 예고하며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을 압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포항지진은 인재(人災)였다는 게 정부 조사연구단의 결론”이라며

“지열 발전사업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0년 말 시작됐는데 어떻게 이 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수백억 원의 예산 투입을 결정한 배경과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경제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이 동원된 점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포항지진의 주변

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활성단층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업체 선정 과정 역시 의혹 투성이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지난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일 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과방위 합의로 내달 4일 열기로 한 KT 아현동 화재사고 청문회를 한국당이 무산시키려 한다며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김성수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한국당 김성태 간사가 어제 KT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로, 한국당은 합의한 대로 청문회 개최에 반드시 응하라”고 촉구

했다.

과방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4월4일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법안소위에서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의 논의를 거부하며 지연 청문회 개최도 함께 거부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든 이유는 오늘과 내일 예정됐던 법안소위 논의를 한국당의 뜻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인데, 법안소위와 KT청문회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라며 “터무니없는 이유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든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힘 있는 여당” vs “무능 여당 심판”

여야 4·3 보궐선거 열전 돌입...각 당 지도부 지원유세

여야는 21일 4·3 보궐선거 열전에 돌입했다. 첫 공식 선거운동일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확대 등 정책 중심 선거를 전면에 내세워 ‘힘 있는 여당’을 각인시키는 데 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심판론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총력을 펼쳤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행보는 뚜렷하게 구분됐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라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보선이 치러지는 경남에 내려가는 대신 경기 안산 스마트허브 전망대를 방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정책 행보에 몰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오는 주말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지역 간담회를 열고,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과 정책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방침

이다. 예산·정책 선거에 방점을 찍는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심판론’을 내세웠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올라탄 데 이어 이번 2곳의 보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다. 정계 입문 후 첫 선거를 치르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창원성산 현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13일 간의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창원성산에 내내 머무르면서 이재찬 후보를 전폭 지원하고 있다. 일찌감치 장원에 거처를 두고 선거를 준비해온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도 새벽 출근 인사부터 시장 방문, 노래 교실까지 종일 강행군을 이어갔다.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김종대·추혜선 의원이 집중 유세에 동참하기도 했다.

“정부, 상반기 10조원 추경 추진”

민주 윤호중 사무총장, 충남 예산정책협의회서 밝혀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획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구체적인 추경 내용 및 규모를 밝히고 국회에 추경 편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제 정부의 추경 편성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6일 ‘미세먼지 추경 편성’ 검토 지시와 국제통화기금(IMF)의 12일 경기부양용 추경 권고 등이다.

윤 사무총장의 이날 이 같은 발언은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충남에 몰려 있어 관련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언급 도중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점에서 상반기 추경 규모는 아직 대략적인 윤곽만 짐작해볼 수 있는 사안이다.

윤 총장은 이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10조원 규모는 최대 그 정도까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조원 규모가 모두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것은 아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다른 것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7.9%

리얼미터 조사 전주보다 3%p↑...권력형 비리 수사 지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주 동안의 내림세를 멈추고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른 47.9%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20일 사흘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공개한 3월 3주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7.9%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자는 전주 같은 조사 대비 3.2%포인트 내린 46.5%(매우 잘못 31.1%·잘못

하는 편 15.4%)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4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 중도층의 결집이 반등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감학의 범무부 전 차관 ‘별장 성 비위 의혹’, 고장지연 리스트, 버닝썬 사건 등 권력기관의 연루 정황이 있는 특권층 비리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정부·여당과 보수야당 간 격차를 둘러싼 대립선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새로운 방식의 독창적인 백내장 수술

젯토(ZEPTO) 노안·백내장

정확 신속 안전

-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삽입 위해 수정체 전낭 절개 필요
- 기존엔 칼을 사용해 수기로 하던 전낭절개를 젯토 장비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제거
- 미세전류를 이용해 360도 원형의 완벽한 수정체 전낭 절개 가능
- 형상기억합금으로 주변 세포에 열 손상을 최소화하고전낭 절개면 인장 강도 높여 안전
- 수기로 제거시 시간이 걸릴수도 있지만 젯토 사용시 수술 시간 현격히 단축
- 동공이 작거나, 백내장 진행이 심하고, 각막이 혼탁해도 쉽게 수술 가능
- 완벽한 전낭 절개로 더욱 안전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1566-9988 9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